



의안번호	제55호
------	------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2. 4. 13.

#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5호
----------	------

제출연월일 : 2022. 4.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1. 12. 31.)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자치행정과”에서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변경

나.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추가

다. 징수유예 관련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

1) 업무의 범위(안 제33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2) 징수유예 등 신청(안 제38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3. 10. ~ 2022. 3. 31.(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041-635-3231)

##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제33조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로 한다.

제38조 중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3호”를 “제25조 및 제25조의2”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임 성 영
	세 정 팀 장	김 무 중 (746-5431)
	담 당 자	나 현 정 (746-543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u>자치행정과</u> 에 둔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 ----- <u>세무부서 외 시</u> <u>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6. <u>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은 영 제51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업무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업무의 범위)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u>제25조의2</u> ----- -----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 ----- <u>제25조 및 제25조의2</u> ----- ----- -----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세무과장 임 성 영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7. 12. 29.]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 개정 2020. 12. 29.]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2. 29.]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법 제2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